

2020년 08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62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2020년 08 (Vol.62)

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인	박소현
발행일	2020년 9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조상규, 송유미, 주찬영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구시,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4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종합지원대책 마련
광주시,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강원도,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차 보고회 개최
충남도,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1-40)」 권역별 공청회 개최
경남도,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정보전략계획 수립
세종시, 2030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확정공고

8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에 그린리모델링 선도사업 착수
국토부, 동행사업 시범 사업 대상지 6곳 확정
교육부, 시·도교육청 ‘그린 스마트 스쿨’ 간담회 개최

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공공재건축·재개발 지원센터 설치

국토부, 빈집 활용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인천시, 한국판 뉴딜 대응 「인천형 뉴딜 추진과제」 보고

광주시, 빈집정비사업 본격 추진

충남도,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추진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 선정

경남도,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본격화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16

국토부, 시설물 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착수

국토부·국방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 체결

국토부, 세계 최초, 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Baseline) UN 승인

서울시, 아파트 관리 온라인 종합플랫폼 'S-APT' 구축 완료

부산시, 「주택SOS 보수기동반 구성·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 광주 에너지전환 거버넌스 출범

경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에너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 GIS 공간정보 기반으로 맞춤형 빈집 관리시스템 구축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08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건축·도시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공주택지원과, 2020.08.11.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 「주택법」 제49조의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②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민간사업자가 건축·준공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하는 사전계약

국토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도시재생정책과, 2020.08.25.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 확대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명확화 및 확대	소규모 점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건축물 공급방법 개선	혁신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

대구시,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계획과, 2020.08.19.



대구시는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 방지 등을 위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대구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를 폐지한다. 전체 용적률은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중심상업 1,300%, 일반상업 1,000%, 근린상업 800%)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토록 상한을 설정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용도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

*용도용적제 :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해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종합지원대책 마련

주거재생과, 2020.08.25.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으로 인해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함께 경제적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활성화를 유도하고자 ①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②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③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시 인근에 공용 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행정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심의하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

광주시,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도시계획과, 2020.08.24.



광주광역시와 나주, 화순, 담양, 장성, 함평 등 인근 5개 자치단체가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대도시권 공간구조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광역권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설정하고 관련 공간계획 체계를 적용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22년 초까지 계획수립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원도,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차 보고회 개최

정책기획관실, 2020.0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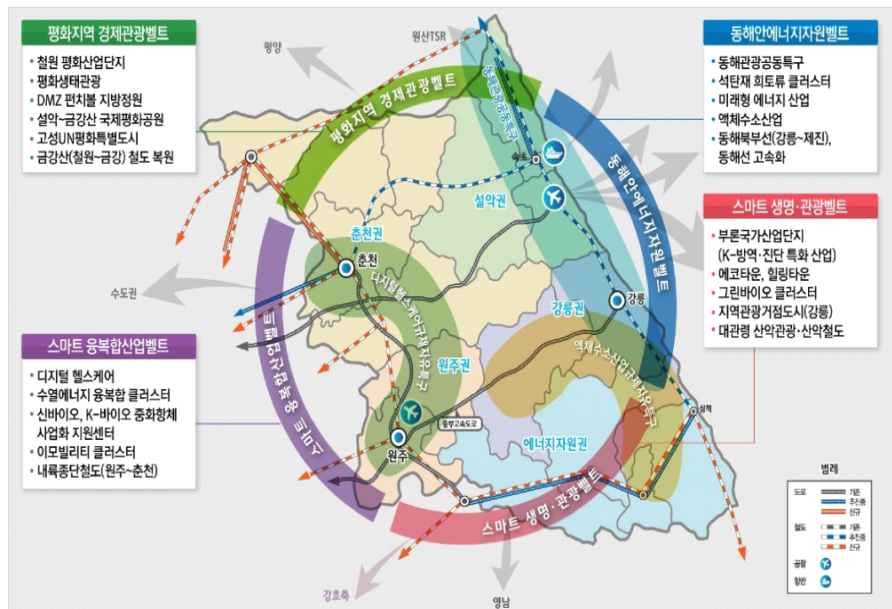
완료

국토
정책

강원도는 「강원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 용역 2차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서는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강원”이라는 비전 아래 ‘북방평화경제권 거점, 웰니스 공동체, 동북아 1일 생활권 중심’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분야별 공간구상과 종합발전구상(안)을 제시한다.

본 계획은 향후 권역별 공청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승인 및 고시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하여, 2040년까지 강원도의 발전전략과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계획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종합발전 구상(안)]

충남도,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1-40)」권역별 공청회 개최

균형발전담당관, 2020.08.20.



국토
정책

충남도는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21~2040)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아산에서는 천안·아산·당진을 포함한 북부권 공청회를, 홍성에서는 보령·서산·서천·홍성·예산·태안을 아우르는 서해안권 공청회를 각각 실시했다. 공청회는 제4차 도 종합계획에 도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제4차 계획안은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중심 충남, 환경중심 충남, 사람중심 충남, 복지중심 충남, 문화중심 충남을 5대 목표로 선정했다.

5대 추진 전략으로는 ①경제 일자리 및 농업 경쟁력 강화, ②청정한 환경 및 자원 관리, ③안전한 정주환경 인프라 조성, ④포용적 지역 발전 기반 강화, ⑤품격 있는 문화·관광지역 조성을 발굴했다.

경남도,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정보전략계획 수립

토지정보과, 2020.08.27.



도시
정책

경상남도는 최근 행정체계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시대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혁신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①공간정보 기반 의사결정지원으로 행정업무 혁신, ②고품질 공간정보 개방 공유로 민간기업 신성장동력 창출, ③위치기반 대민서비스로 도정참여와 소통창구 확대를 목표로 했다.

전략과제로는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융·복합활용 플랫폼 구축,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정보인프라 구성, 안정적 플랫폼 운영을 위한 조직 및 법제도 기반환경 마련이 제시됐다.

세종시, 2030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확정공고

경관디자인과, 2020.08.31.



세종특별자치시가 2030 세종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30일간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시는 2014년 경관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5년마다 변화된 도시여건 속에서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부문별 경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2030 세종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착수해 그동안 제반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

특히 이번 재정비에서는 경관관리 매뉴얼 등 세부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밖에 낙후지역, 관문, 공원·수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경관사업을 발굴 했으며 민·관·학 공동 협력으로 추진할 경관협정방안도 제시했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에 그린리모델링 선도사업 착수

공공주택총괄과, 2020.0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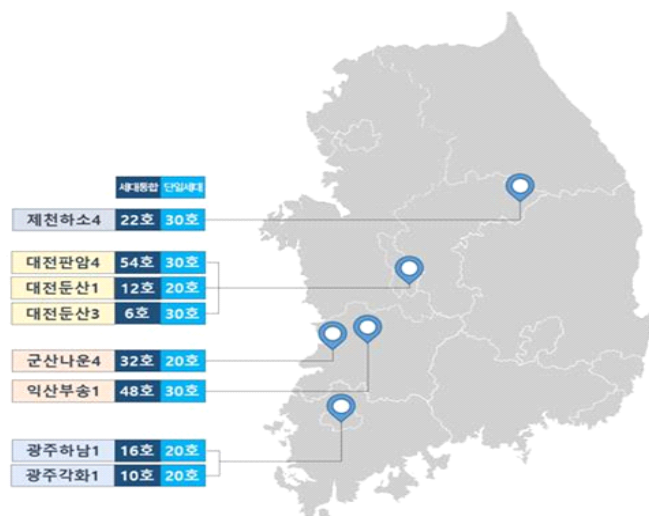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시그니처 사업 중 하나인 그린리모델링은 주택 내·외부의 에너지 절감 및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①기후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②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③노후 공공임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 삶의 질을 강화하는 일석삼조 이상의 사업이다.

특히 에너지 성능의 경우 고성능 단열재, 창호, LED 조명 등을 교체할 시 대전둔산 3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30%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입주인 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영구임대 그린리모델링 단지 선정지역]

국토부, 동행사업 시범 사업 대상지 6곳 확정

주거재생과, 2020.08.09.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여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개념)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골목길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의 성능개선에도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택단위 집수리에서 골목길, 마을단위로 재생범위 확장]

해당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①경관관리 연계형, ②에너지관리 연계형, ③공공기여형, ④거점시설 연계형, ⑤사회공헌활동 연계형 집수리 사업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경관관리 연계형	건축협정,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마을 경관 개선
에너지관리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시설 설치 등과 연계
공공기여형	마당개방, 1층 빈점포 제공 등 주민의 공공기여를 결합
거점시설 연계형	주민 공동이용시설 구성과 골목정비, 인접주택의 집수리 연계
사회공헌활동 연계형	기업, 지역활동단체, 주민공동체 등의 활동과 연계

교육부, 시·도교육청 ‘그린 스마트 스쿨’ 간담회 개최

기획담당관, 2020.08.18.



교육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그린스마트 스쿨’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노후학교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스마트 스쿨의 기본 방향으로 ①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②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③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④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를 제시했다.

* 생활SOC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지자체 주관 사업

스마트교실	- 학교별 학급별로 첨단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교원과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
그린학교	- 학생 건강을 우선하는 건축기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그린학교
공간혁신	- 과거의 규격화된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 학습 씬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 - 설계 과정에서 학생, 교원 등 사용자 참여를 강화
학교복합화	- 학교가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층이 교류하는 공간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시설을 지역과 공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미래학교 추진단’을 설치하여 그린 스마트 스쿨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가 참여하는 학교 공간혁신,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공공재건축·재개발 지원센터 설치

주택정비과, 2020.08.20.

완료

건축
정책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공공재건축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주요 컨설팅 항목]

공공재건축 안내	공공재건축의 사업 구조와 절차, LH·SH 등의 역할(총괄 사업관리자) 등을 설명
사업성 분석	사업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 일반분양가, 공사비 등을 분석하여 공공정비사업 시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수익률(비례율), 추정분담금 등 조합이 사업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건축계획(안) 구상	단치배치(안), 세대구성(안), 단지개요 작성을 지원하고, 건설되는 개략적인 건축구상(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참여 여부 판단을 지원
후속 행정 절차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 등 다양한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후속 행정 절차, 지원내용,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도 안내

국토부, 빈집 활용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주거재생과, 2020.08.30.

진행

도시
정책

주택
정책

국토교통부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1. 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

-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지자체가 내실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내 배포
-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이 보유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빈집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이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2.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 성과 가시화

- **도시재생뉴딜사업지내 빈집정비사업 조속 추진**
 -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에서 진행 중인 빈집 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 추진되어 이와 같은 빈집정비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추진**
 -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연계를 보다 고도화하여 새로운 빈집 정비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
 - *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인정사업 포함)으로 함께 재생하는 빈집 정비에 특화된 재생사업
 - 사업 유형은 ①빈집 거점개발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을 함께 재생하는 면단위 사업, ②빈집 거점개발에 인정사업을 결합하여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 등

3. 빈집 관련 법·제도 개선

- (철거 등 명령 실효성 제고)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 장의 안전조치·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도입
- (수용권 도입)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취득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의 수용·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용권을 도입하는 방안 마련
- (세제 체계 개편)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빈집의 철거·활용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 체계 개편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

인천시, 한국판 뉴딜 대응 「인천형 뉴딜 추진과제」 보고

정책기획관실, 2020.08.03.

완료

도시
정책

인천광역시는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 뉴딜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천형」 뉴딜추진방향으로는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등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기본 기조로 하되, 인천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산업 뉴딜을 추가해 3+1 축으로 방향을 잡기로 했다.

도시문제 등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스마트 상하수도, 스마트 자원순환, 섬 지역 스마트 의료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도시 환경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숲, 단절된 녹지 연계, 전선 지중화, 친환경 버스·택시 도입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한편, 인천시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상풍력발전, 스마트 산단, 디지털 트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과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와 AI클러스터 육성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광주시, 빈집정비사업 본격 추진

도시정비과, 2020.08.10.



광주광역시에는 범죄 발생 우려와 주거환경을 악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정비에 본격 나선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으로, 광주시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에 걸쳐 실시한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자치구와 올해 9월말까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기 등 정비계획을 구체화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빈집 관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철거·정비된 빈집은 앞으로 지역 상황에 따라 공영주차장이나 마을 커뮤니티센터, 쌈지공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충남도,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추진

기후환경정책과, 2020.08.25.



충남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안심마을: 도내 읍·면·동 내 모든 마을회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주요 사업은 쿨루프 시공, 노후 보일러 교체 및 배관 청소, 고효율 조명 교체, 단열 개선,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찾아가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이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도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기후변화 취약지역 대상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함께 부담기로 했다.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 선정

도시계획과, 2020.0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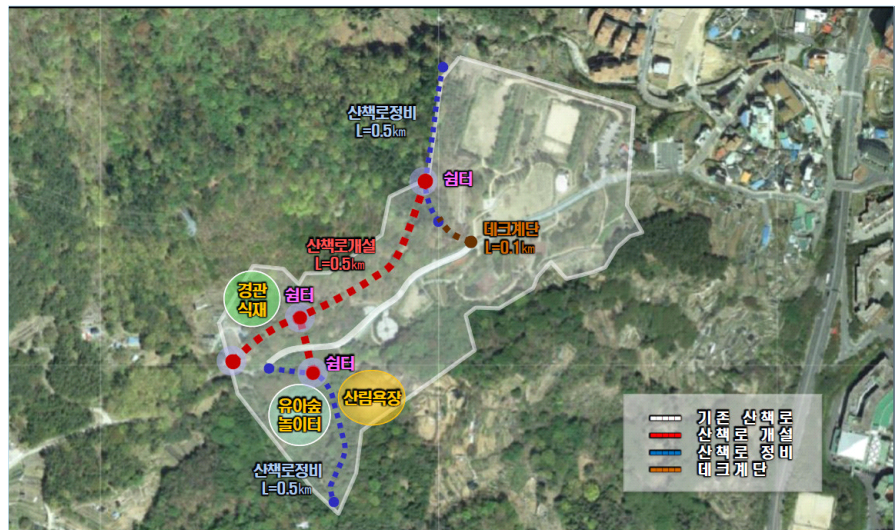
완료

도시
정책

경상남도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창원시 만날공원 사랑의 숲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만날공원 사랑의 숲’은 총 사업비 7억 8천 6백만 원을 투입해 환경 친화적인 생활공원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산림욕장과 유아숲 놀이터 및 산책길 등을 조성하고 둘레길도 정비해 만날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사랑의 숲 조성사업’으로 지역 문화축제인 ‘만날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여가와 휴식이 가능한 녹색 휴양 공간 제공으로 공원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구상도]

경남도,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본격화

도시계획과, 2020.08.20.



‘2020년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서 전국 광역시·도 중 최다로 선정됐던 경남의 스마트시티 사업(전체 4개 분야, 11곳이 선정)등이 착수를 시작하면서 ‘경남형 스마트시티’ 조성이 본격화 되고 있다.

‘스마트 시티 사업’은 민간·지자체·대학 등이 참여해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발굴·확산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현재 까지 도내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스마트타운 챌린지,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4개 분야 사업을 19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사업개요]

년도	사업명	시·군	사업내용
`18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 1단계(예비사업)	김해시	가야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감형 관광 도시 조성 MP 수립
	스마트시티 챌린지 - 1단계(예비사업)	창원시	진북산단 에너지·환경 등 문제 해결 MP 수립
	스마트타운 챌린지 - 1단계(예비사업)	통영시	동호동, 중앙동 등 구 상권 문제 해결 MP 수립
`19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 2단계(본 사업)	김해시	본 사업 시행(20년 7월 완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양산(15년), 김해(17년) - 기 완료	창원시, 진주시	화재, 방범, 재난 상황 CCTV영상 서비스(112, 119 등) 제공
`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 1단계(예비사업)	김해시	김해 골든루트산업단지 스마트물류, 스마트워크 등 MP 수립
	스마트타운 챌린지 - 1단계(예비사업)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시티투어 서비스, 홀로그램 전시 안내 등 MP 수립
	스마트타운 챌린지 - 2단계(본 사업)	통영시	동호동, 중앙동 등 구 상권 문제 해결 사업 실행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천시, 거제시	- 사천시 관내 초등학교 5개소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 알리미 구축 -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IoT 기기 연계한 공원 이용 통합 시스템 구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천, 남해, 거제, 하동, 통영, 밀양	화재, 방범, 재난 상황 CCTV영상 서비스(112, 119 등) 제공

건축·도시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완료

진행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안전

문화
관광

국토부, 시설물 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착수

시설안전과, 2020.08.12.

진행

건축
정책

안전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을 보다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사업을 착수한다.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PDF 책자 형태로 제출된 안전진단 보고서에서 균열, 콘크리트 강도 등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

최근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호우·폭염 등 기상이변이 속출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과학적·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간 시설물 관리주체가 제출한 안전진단 보고서는 관리주체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실진단 여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 등으로 시설물 안전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정보를 DB화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였으며, 올해는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수행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부
1단계(DB 입력) 2,000명 데이터 입력	2단계(DB 관리) 300명 데이터 검수	3단계(사업운영) 품질관리	4단계(성과관리) 사업성과 관리

국토부·국방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 체결

도시경제과, 2020.08.23.

완료

도시
정책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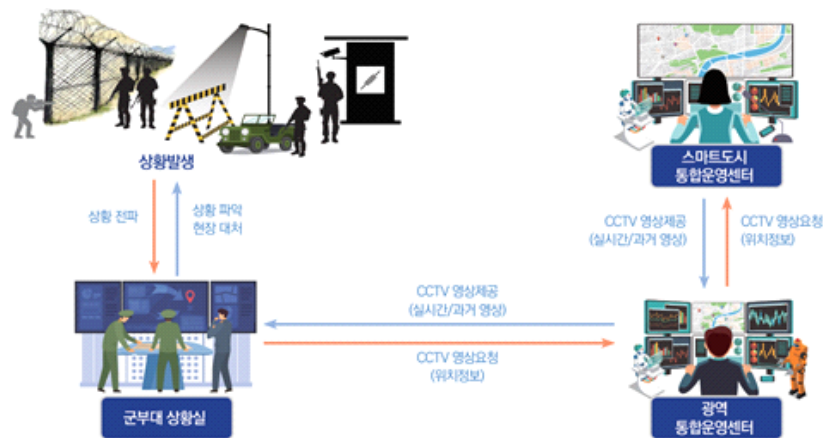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군 작전·훈련 또는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군부대가 지자체 CCTV를 활용해 적기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병력을 지휘·통제하는 군부대 상황실과 지자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센터의 CCTV 영상 정보를 실시간 공유·활용함으로써, 군 작전 정보 분석 및 통제를 지원하고 훈련지원·재난대응 등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 지자체가 방범,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정보시스템(CCTV 등)을 연계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

다만, CCTV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평시에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허용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지역재난대처와 관련 되는 경우에만 한정해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일부 군부대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서울시와 용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작전통제·훈련 지원 서비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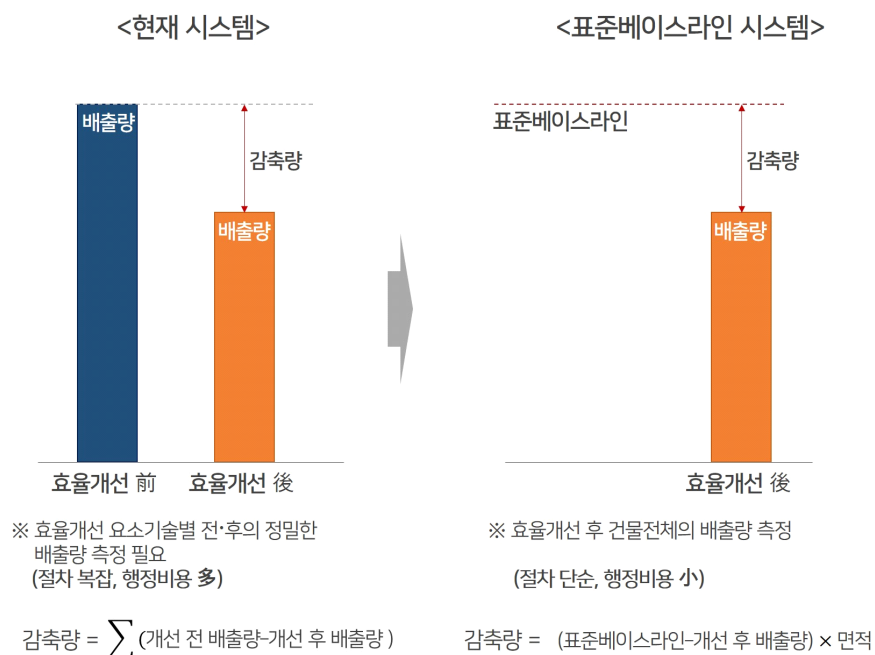
국토부, 세계 최초, 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Baseline) UN 승인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2020.08.25.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표준베이스라인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분석하여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아파트 관리 온라인 종합플랫폼 'S-APT' 구축 완료

공동주택과, 2020.08.25.



서울시가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을 개발, 구축을 완료했다. 아파트 내 주민 의사결정을 비대면·온라인 전자결재로 하고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며,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정보제공까지 가능한 온라인 종합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구축한 플랫폼을 무료로 보급한다.

‘S-APT’는 3S(Seoul, Smart, Safety)를 의미하며, 4가지 핵심기능으로 구성된다. ①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 시스템 ②전자문서 공개시스템 ③지자체-아파트 단기간 문서 수발신을 위한 문서유통 시스템 ④긴급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안내방송을 위한 상황전파 시스템이다.

서비스 조기 안착을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홍보를 실시한다. 또 서울시 4개 권역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사용자 교육 등도 추진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부산시, 「주택SOS 보수기동반 구성·운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택정책과, 2020.08.31.



부산시와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 주택보수 지원을 위한 「주택SOS 보수기동반 구성·운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에 따른 이재민들이 일상에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주택보수가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성사되었으며, 향후 상호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긴급 주택보수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긴급 주택보수 대상자 선정(구·군 재난부서 추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자가 우선) 및 행정지원을 하고,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긴급 주택보수(도배, 장판 등 주거생활에 긴급한 사항) 및 보수에 대한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광주 에너지전환 거버넌스 출범

에너지산업과, 2020.08.26.



도시
정책



광주시는 26일 ‘광주 에너지전환 거버넌스’를 출범했다.

‘광주 에너지전환 거버넌스’는 광주형 AI-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비상설 협의체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민단체, 에너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가그룹인 ‘그린에너지 기술분과위원회’와 시민단체로 이뤄진 ‘시민분과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에너지 자립 추진과제를 기술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제안하고 사회적 합의, 시민 참여 유도 등을 이끌게 된다.

경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에너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도시재생과, 2020.08.28.



도시
정책

경상북도는 지역 에너지 자립을 제고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에너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을 통해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연료전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사항 협력과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서부발전은 사업개발·타당성 검토·연료전지 설치 및 사업운영을 담당하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조정 및 컨설팅을, 영남에너지서비스는 연료 공급 및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의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경북도와 문경시는 연료전지 사업 추진과 함께 문경공장의 장소특수성을 활용해 문경컬처팩토리,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익스티림 스포츠 테마파크 등 차별화된 산업거점을 육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GIS 공간정보 기반으로 맞춤형 빈집 관리시스템 구축

건축주택과, 2020.0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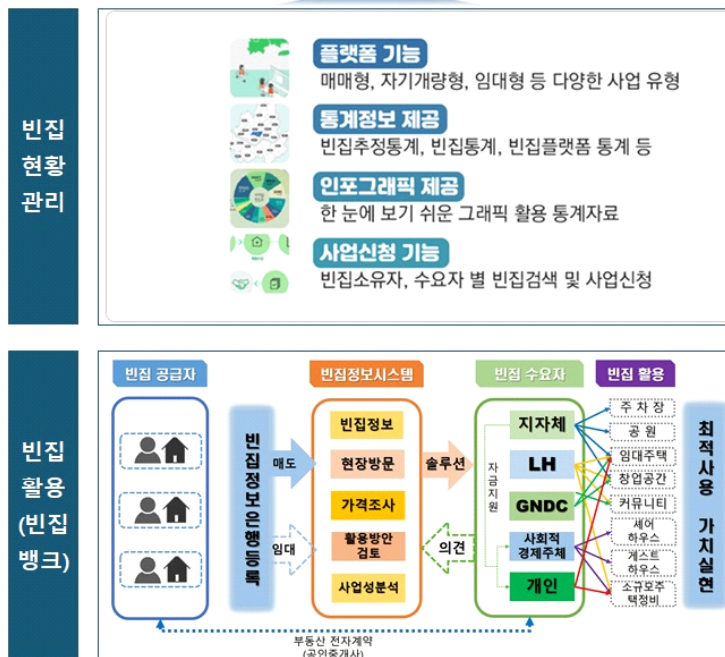


경상남도는 빈집의 위치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GIS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업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의 구조, 외관 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으로 최종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해 오는 2021년도에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빈집정보들은 주차장, 공원, 임대주택 등의 다양한 정부정책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연계한 빈집뱅크 기능을 통해 세어하우스, 창업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에도 빈집정보시스템을 탑재해 공간정보 빅데이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빈집 가치 실현



[빈집정보시스템 활용 가치]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9 772635 514009

ISSN 2635-5140